산속하고 친절한 은행
동양지축은행
Tel.(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55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9월 22일 (음력 8월 1일) 금요일

광주 학원, 학교보다 5배 많다

3년새 73% 증가…전국 평균은 2.6배

서울·부산 이어 세번째…전남은 56%↑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사설 입시·보습학원 수가 각각 72.6%와 56.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사설 학원 수는 1천481개로, 관내 초·중·고교 274개교 수의 5.4배에 달해 전국 평균(2.6배)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전국 7대 대도시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 대구·인천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참여정부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학교 수준별 이동교육, 방과후 학교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정반대의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 교육정책의 재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설 입시·보습학원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1천481개로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02년 말의 858개에 비해 623개(72.6%)가 늘었다. 전남도 627개에서 980개로 353개(56.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1만6천695개에서 2만7천724개로 1만1천29개(66.1%) 늘었다. 이 같은 학원 수는 전국 1만889개 초·중·고교 수의 2.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인구 140만명의 광주지역 학교별 학교 수와 학생 수는 지난 3월 현재 초등학교 134개교·13만6천84명, 중학교 79개교·7만575명, 고등학교(실업계 포함) 61개교 5만9천71명. 사설학원 수가 학교 수보다 5.4배 많다.

인구 200만명인 대구의 경우 초등학교 201개교·21만3천212명, 중학교 118개교·11만2천661명, 고등학교 85개교 ·10만1천793명 등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광주보다 각각 130개교와 16만1천936명이 많은데도 학원 수는 광주보다 되레 349개 적다.

인구 260만명인 인천의 학원 수는 1천41개로 광주보다 440개 적고, 인구 144만명의 대전도 820개로 광주에 비해 661개 적다. 인구 수만 감안해도 광주의 사설학원 수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훨씬 많은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설학원의 증가는 공교육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며 "현행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고질적인 사교육비 증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알아서 쓸고 닦고 '청소로봇'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유비쿼터스사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06 광주정보통신전시회'가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개막 첫날 전시장을 찾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는 '청소로봇'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전공노 사무실 오늘 강제폐쇄

광주 동구·서구·북구·광산구 등 광주지역 4개 구와 목포·여수·순천 등 전남지역 17개 시·군이 22일 오후 3시 일제히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지부 사무실 강제폐쇄에 들어간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지난 달 행정자치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자진폐쇄하지 않은 전공노 사무실을 반드시 강제폐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전공노측은 사무실 폐쇄를 저지할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행자부는 21일 전공노 등 불법공무원단체가 합법노조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물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22일 오후 3시를 기해 해당 자치단체별로 강제대집행 등을 통해 일제히 폐쇄하라는 지침을 재확인했다.

행자부는 또 강제폐쇄조치를 앞두고 21일 오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21개 자치단체들은 이날 오전 행정대집행 계획을 각 전공노 지부에 통고하는 한편, 경찰 등에 병력을 요청했다.

각 자치단체들은 직원과 경찰 병력 60명, 소방서 직원 등 총 1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전공노 사무실을 강제폐쇄할 계획이며, 전공노측은 지부 별로 20여명의 사무실 사수대를 조직해 강제폐쇄를 저지할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은 물론 자칫 부상사태 마저 우려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21개 전공노 지부는 21일 각 지부별로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앞으로 민주노총이나 민노당, 사회시민단체 등과 함께 연대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검찰총장 "대법원장 발언 유감"

사법 사상 초유사태…변협선 사퇴 요구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검찰과 변호사들에 대한 비판 발언을 잇따라 쏟아낸 것과 관련, 검찰총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변협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상명 검찰총장은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의 잇단 발언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 총장은 이날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통해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우리나라 사법 사상 처음이어서 대법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의 즉각 사진 사퇴를 촉구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대법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日 아베 "韓·中과 정상회담 희망"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신임 총재가 20일 중국,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재는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일본 지도자들간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양측이 노력을 기울여 진전을 이뤄내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총재는 또 중국 및 한국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웃국들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들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내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아베 총재의 선출 후 "우리는 일본 자민당의 신임 총재가 약속을 지키고 중·일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는데 열심히 일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P연합뉴스